

# 光州日뢖

SINCE 1952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79호 1판 대표전화(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7월 15일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내년 예산 657조원…20년 만의 최대 긴축

#### 정부, 2024년도 예산안 의결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수산물 예산 7400억으로 확대

2024년도 예산안은 657조원대의 '긴축 예산'으로 짜여지고, 이는 20년만의 최대 긴축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 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 모 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 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 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 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 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 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세 부 내역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전국체전 성공 개최 다짐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28일 오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오는 10월에 있을 제 104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

지 7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또한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 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을 두고서는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 -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 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 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 발(R&D) 기술 협력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설탕·우유값 인상…슈거·밀크플레이션 오나

#### 빵·음료·치즈·아이스크림 등 식품 물가 부담 가중될 듯

올 하반기 식품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설탕 가격이 올라 '슈거플레이션' (슈가+인플레이션) 재연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흰 우윳값이 오르게되면서 '밀크플레이션' (밀크+인플레이션) 마저우려되고 있다. 설탕과 우유 가격 상승에 빵과 커피, 음료 등 전반적인 식품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

제조원 및 판매원 : ㈜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올 10월부터 흰 우유 제품 '나100%우유' (1 *l* )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 3%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낙농진흥회가 10월부터 마시는 우

이번 인상은 낙농진흥회가 10월부터 마시는 우 유에 쓰는 원유(음용유용 원유) 가격을 *l* 당 88원 (8.8%)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낙농진흥회는 10월부터 음용유용 원유는 *l* 당 가격을 88원 올려 1084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치즈 등 가공 유제품의 재료인 '가공유용 원유' 는 *l* 당 87원 올려 887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우윳값이 오르면 유제품이 함유된 빵과 아이스크림, 커피 등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역시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l 당 49원 올랐을 때도, 우유는 10% 안팎 올랐다. 또 커피와 빙과업계들은 유제품이 함유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바 있다.

설탕 가격도 문제다. 세계 설탕 생산 1위 국가인 인도가 올 10월부터 자국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수 출을 금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설탕은 우유와 함께 빵과 아이스크림 등 주요 가 공식품의 원재료다. 우유와 설탕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 가공식품을 비롯해 외식업계 등 소비자 가 격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오염수 방류 중·일 갈등 격화 한·중·일 협의체 재개 '소통'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개시 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실무적으로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중일 갈등 격화가 한중일 3국 협의체 재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국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연내 정상회의 개최를 목 표로 3국 간 협의체 재개를 위해 실무적으로 관련 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후 중국에서는 일본인학교에 돌을 던지거나 일본에 항의·욕설 전화를 거는 등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중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은 이번 사태가 일본 의 잘못으로 촉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염수 배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는 등 사태가 정부 간 공방으로도 번졌다.

한중일 3국 협력이 그동안 양자 갈등으로 차질을 빚은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 중일 갈등이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추진하는 3국 협의체 재개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았다.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외교당국 논의는 부국장급 회의와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 외교장관 회의 등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외교당국 간 회의 일정을 중국·일본과 계속 조율 해 왔으며, 현재까지 중일 갈등의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장기화 하나

▶2면

오염수 방사능 검사 1개 시료에 3시간 ▶6면

雨···雨··· KIA 우천 연기 19경기 '한숨' ▶18면





#